

해수부, '낙시쿠폰제' 시행을 구상하고 있다

허만갑 기자

해양수산부가 미국,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시쿠폰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국민일보는 “해수부가 낙시인들이 일일낙시권을 돈 내고 구입하는 낙시쿠폰제 시행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기자가 세종시 정부청사를 직접 찾아가서 취재한 듯 ‘세종=정현수 기자’라고 하단에 명기되어 있다. 기사가 좀 길지만 그대로 인용한다.

“낙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수치로 확인된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90년 325만명으로 추산됐던 낙시인 수는 지난해 767만명으로 경총 뛰었다. 낙시인을 ‘만 19~79세 성인 중 1년에 한 차례 이상 낙시를 한 사람’으로 잡았을 때 수치다. 낙시인의 범위를 ‘한 번이라도 낙시를 경험한 사람’으로 넓히면 1000만명을 훌쩍 넘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2009년 3992척이던 낙시어선은 지난해 4500척으로 늘었다.

낙시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갈등과 문제점도 양산되고 있다. 해양오염과 특정 어종 남획이 대표적이다. 해수부가 용역을 줬 2014년 진행한 한국자연경제학회의 연구 결과(“낙시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국 낙시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연간 2만427t으로 추정된다. 녹조·적조 현상을 야기하는 딱밥, 납덩이로 만들어진 낙시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수치는 낙시인을 573만명으로 봤을 때 추계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해양오염 정도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봤다.

낙시인들이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면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과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는 한 해 연근해 어획량의 약 13%를 낙시인들이 걷어가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낙시문화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1974년부터 낙시면허제를 비롯해 낙시행위 관리 정책 마련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매년 낙시인들의 반발 등에 부닥쳐 결실을 보지 못했다. 87년 낙시면허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여건 미비를 이유로 보류됐고, 95년 연간 1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낙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정부부처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좌초됐다.

하루 5000원 이하 '낙시 쿠폰' 검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방치되던 낙시 관리 방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어민 반발뿐만 아니라 낙시를 오랫동안 즐겨온 원로 낙시꾼 사이에서도 최근의 무분별한 낙시 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낙시면허제 도입에 반대해 왔던 낙시인단체와도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감을 불러일으켰던 면허제 대신 쿠폰제를 고심하고 있다. 면허제는 일정한 비용과 교육, 특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탓에 낙시인들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쿠폰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정해진 기간에 특정 지역에서 자유롭게 낙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일일 낙시권’ 가격을 5000원 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관련 용역은 내년 2월쯤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쿠폰제 실시에 따라 견힌 돈은 건전한 낙시문화를 조성하는 사업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낙시 행위로 오염된 해양 환경을 정화하고, 치어를 방류해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낙시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용부담금을 내는 셈이다. 해수부는 낙시 쿠폰제와 별도로 특정 어종에 어획량 상한제를 두는 방안도 고



낙시쿠폰제를 실시하는 미국의 경찰들이 낙시터를 순찰하고 있다.



민하고 있다. 일부 인기 어종의 남획으로 낚시인과 어민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주꾸미, 갈치, 문어가 대상 어종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락)

기사를 읽고 해양수산부로 전화를 걸어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수산자원정책과의 조문래 주무관은 “아직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쿠폰제를 비롯한 낚시관리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았는데 그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올 것이다. 그때 아마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며 낚시쿠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해양수산부의 적극적 행동

‘낚시쿠폰제’란 무엇인가? 낚시면허제의 일종으로, 돈을 내고 낚시쿠폰을 구입하는 미국식 피싱 라이선스(Fishing license)를 알기 쉽게 풀이한 것이다. 피싱 라이선스를 ‘낚시면허’로 번역했더니 낚시인들이 반감을 가지자 ‘낚시쿠폰’으로 의역하여 새로이 만든 용어다. 실제로 미국식 면허제는 쿠폰제라고 풀이하는 것이 맞다. 즉 일정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부여받는 독일식 면허제와는 달리 누구라도 돈만 내면 즉석에서 쿠폰을 사서 낚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번번이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낚시면허제 시행을 새 정부는 또 테이블 위에 올리려 하고 있다. 그 이름이 면허제든 쿠폰제든 낚시인들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낚시라이선스의 시행을 정부가 끝끝내 추진하려는 이유는, 낚시터 오염과 어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원인 제공자인 낚시인들이 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낚시인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했더니 조문래 주무관은 “그래도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면허제 시행을 극렬히 반대했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낚시인들 스스로 최근의 낚시환경을 위기국면으로 보고 제도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저기서 감지되는 흐름을 보면 낚시쿠폰제에 대한 해수부의 의지는 이전 정부 때보다 훨씬 강한 듯하다. “낚시인구가 767만으로 늘어났다”는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 급증하는 낚시인구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낚시쿠폰제를 구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등 12명이 ‘낚시신고제’ 법안을 발의하자 그들을 설득하여 법안을 철회시키기도 했다.

지난달에 본지는 「국회의원 12명 바다낚시신고제 법안발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는데, 기사가 나간 후 대표발의를 한 김종희 의원실의 함성곤 비서관이 낚시춘추 편집실에 전화를 걸어 “10월 19일부로 법안을 철회했으니 그렇게 낚시인들에게 알려달라”고 했다. 왜 갑자기 법안을 철회하느냐고 묻자 “해수부에서 낚시인과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 낚시신고제 안은 철회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다른 한국의 낚시특성 간과해선 안 돼

“낚시인들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해수부의 판단은 어느 정도는 맞다. 주꾸미 낚시로 인한 어민과의 갈등, 점점 늘어나는 낚시금지구역, 낚시인 스스로 목격하는 낚시터 쓰레기 앞에서 ‘차라리 돈을 내고 맘 편히 낚시하고 싶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낚시쿠폰제 시행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돈을 걷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1일 낚시비용 5천원이 비싼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말에 2박3일 일정으로 출조하는 직장인들에게 1회 1만5천원의 출조비라면 부담스런 금액이다. 퇴근하고 산보 삼아 바다낚시를 즐기는 부산 낚시인들은 한 달에 1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낚시쿠폰 판매로 나오는 세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은 더 어려운 문제다. 정부 추산 낚시인구 750만명이 동시에 낚시를 간다면 하루에 375억원의 돈이 걸린다. 쿠폰제는 그 돈이 각 지자체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한국의 지역정부가 그 돈을 낚시터 개선과 어자원 관리에 재투자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런 피드백이 없다면 낚시인들은 돈을 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영미식의 낚시쿠폰제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결코 알 수 없다. 미국, 호주, 독일 등지는 낚시터가 큰 강이나 호수로 압축되어 있어 관리하기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물낚시터가 수많은 저수지와 소하천으로 분산되어 있어서(저수지만 1만8천개다.) 미국보다 땅은 좁지만 훨씬 더 많은 관리인력이 필요하며, 더구나 밤에 이동하고 아침 일찍 철수하는 밤낚시 문화로서 쿠폰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지금 해수부는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바다낚시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실제로 쿠폰제가 시행되었을 때 문제는 바다보다 민물에서 발생할 소지가 더 크다. 이런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제도만 가져와서 시행하면 미국처럼 될 것이라 생각했다가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